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3-4(통권 10호)

글로벌 공동체 형성과 대응: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체류지원 정책에 관하여



글로벌 공동체 형성과 대응: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체류지원 정책에 관하여

책임집필 임보미

감 수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이 제안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NRF-2018S1A6A3A03043497).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및 정주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와 통계 자료에 관해서는 대구대 김명광 교수의 도움을 받았음.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3-4(통권 10호)

글로벌 공동체 형성과 대응: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체류지원 정책에 관하여

Contents

목차

I. 제언 배경	1
1. 국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1
2. 다층적 모빌리티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2
3. 외국인 유학생의 변종적 정체성	4
II.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이	5
1. 정책의 변천과 추이	5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6
III.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정주 장벽의 문제	9
1. 학업상의 문제	9
2. 이주자로서의 문제	10
2. 정주와 공동체 진입의 장벽	12
IV. 제언	13
1. 모빌리티 관점에서의 유학생 연구의 활성화	13
2. 유학생 관리의 법제적 장치 마련	13
3. 탈아시아중심 유학생 유치	15
4. 장기적이고 거시적 전략 마련	15
5. 비자 절차의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	16
● 참고문헌	18



〈초록〉

글로벌 공동체 형성과 대응: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체류지원 정책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우 낮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에 이르게 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 수십 년 내에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위협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인재 유치와 생산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쳐 2023년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 출신의 학생이라는 정체성 외에 노동자, 관광객, 이주자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정책적 접근은 미비한 상태이다. 가파른 유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고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국내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정주가 저조한 이유로는 유학 기간 내 학업의 어려움, 외국인 이주자로서 겪는 문제, 졸업 후 구직과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의 까다로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유학생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의 연구 외에 유학생의 이동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복합적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와 통제 중심의 현행 법률보다 호주의 예처럼 유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마련이 요청된다. 셋째, 현재와 같이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이 유학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탈아시아중심적 유학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역시 이주자의 한 유형으로 난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비자 절차의 개선과 산학 취업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Keywords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정주, 외국인 유학생 취업, 유학생 정책

〈Abstract〉

Formation and Response of Local Communities, Policies Regarding the Influx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Residents

While the birth rate in South Korea remains extremely low, the age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expected to result in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leading to serious social issues. Furthermore, it is forecasted that the majority of regions will enter a stage of population decline within the next few decades. Faced with these challenges, the government has actively pursued polici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to secure capable people and a productive workforce. As a result, as of 2023,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exceeds 200,000.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not only exhibit the identity of students but also display a diverse range of identities, such as workers, tourists, immigrants, and more. However, there needs to be more in-depth research and policy approaches regarding this phenomenon. Despite the 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domestic employment rate remains extremely low, thus hindering the transi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o permanent residents. The reasons for this low rate of domestic settlement include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during the study period, issues faced by foreign immigrants, and challenges in obtaining visas for post-graduation job hunting and employment. In addition to research focusing on analyz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oposing alternatives, there is a need to accumulate studies that analyze the mo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and pay attention to their complex identities. Furthermore, a call for legislation, similar to Australia's example, guarantees quality education and welfa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moving away from current laws centred on management and control. Additionally,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the phenomenon where a larg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originate from specific Asian countries and to develop programs and support policies aimed at diversifying the source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also fall under the category of immigrants, alongside refugees,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Therefore, policies must be coherent and harmonized with policies addressing these other immigrant groups. Improvements in complex visa procedures and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rough industry-academia partnerships are also necessary.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visa, permanent residence, employ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policy

I. 제안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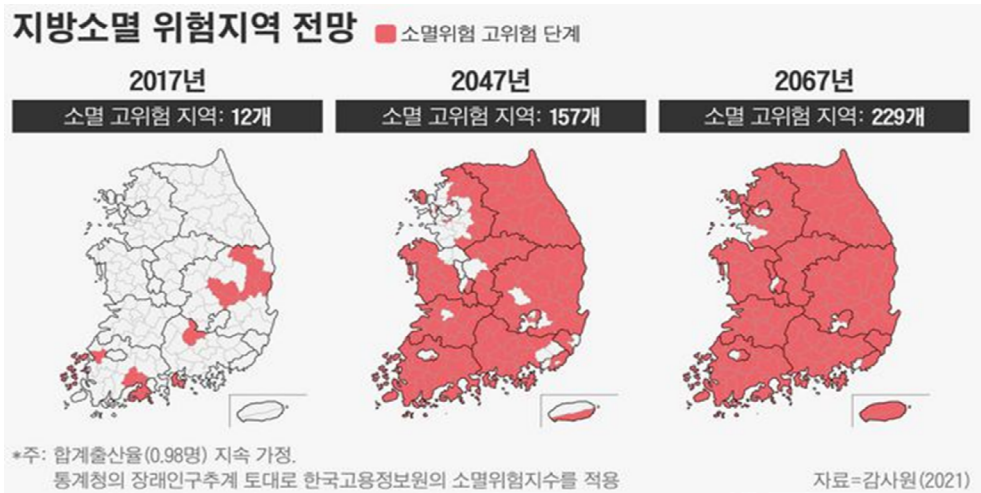
1. 국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5,184만 명)으로 2021년부터는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24년 현재 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추산됨.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9,186명, 출산율은 0.778명으로¹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음.²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반비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노동 공급의 감소, 생산성 약화, 사회적 부담의 증가 등 다층적인 문제를 양산하게 됨.

2021년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우리나라 소멸 고위험 지역은 12개였고, 2047년에는 157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음. 전지구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2024. 1. 20. 최종방문).

2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12. (2024. 1. 20.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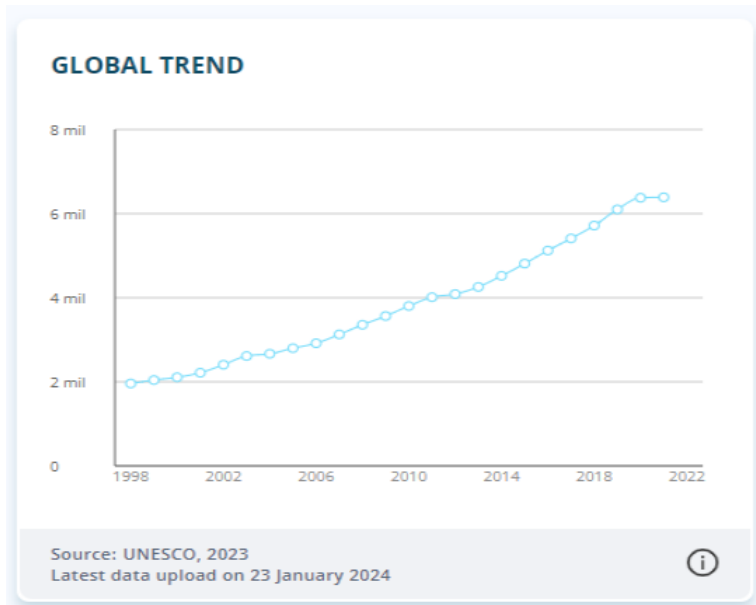
〈그림 - 1〉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
(출처: 조선일보)³

외국인 유학생은 그 연령대가 생산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교육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이에 정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음. 2004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주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모색해야 할 의미있는 시점 임.

2. 다층적 모빌리티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유학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며 2000년 기준 약 210만 명에서 2021년 기준 640만 명에 이르고 있음.

3 조선일보, “[지방이 다시 된다] © ‘청년 뺏기 경쟁’은 제로섬 게임… “지역만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2022년 11월 4일자.



〈그림 - 2〉 국제 유학생 추이
(출처: Migration Data Portal)

이는 오늘날과 같은 고-모빌리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서 해외 유학을 위한 학생들의 이동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송출국의 문화·가치관 등의 유입과 이를 요인으로 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목적국에서 습득한 지식·문화 등의 전파와 재생산 등 학생 이동이 거시적이고 다층적인 모빌리티 생성의 모태로 작용함을 의미함. 즉,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유입 증진을 위한 수준을 넘어 유학생의 체류기간, 국내 정주를 위한 단계, 정주 이후의 단계까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종래 해외 유학의 목적지는 북반구에 소재한 이른바 선진국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유학 목적지로 부상하게 되었음.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 체험한 문화 등을 본국에 전파하도록 하여 한류 확장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지속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함.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의 체류와 정주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국내 체류와 정주는 본국과의 단절이 아니라 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글로벌-로컬 관계 형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학생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외국인 유학생의 변용적 정체성

여타의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정착이 전형적인 ‘이주’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생, 노동자, 여행자 등의 모습을 가진 초국적 청년 이주자⁵로서 그 정체성을 수시로 변화시키기 때문에⁶ 보다 더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이들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로 상징하는 것을 넘어 변용적 정체성 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학업을 위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상징한 정책을 지양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채로운 정체성을 통한 경험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및 정주지로서의 선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고민경,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4), 2022, 482쪽.

5 김도혜,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2019, 42쪽.

6 김도혜, 앞의 글, 49쪽.

II.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이

1. 정책의 변천과 추이

최초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1967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교육부		법무부	
1967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실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2002
1967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제정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확대 방안」	2003
200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발표 한국 유학 박람회 실시	「출입관리법령」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 조항 신설,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 대책」,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	2005
2004	Study Korea Project 시행 외국인 어학연수 관리지침 제정	「제한 외국인 취득기본법」,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제도개선 방안」,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 합동 고졸 상담	2007
2005	Study Korea 2010 Project 시행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번),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 Contact Korea	2008
200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 표준 업무처리 요령 제정 Study Korea 2012 Project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 (HuNet Korea)	2009
2009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 발표	우수인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김잡이」	2010
2010	Global Korea Scholarship 시행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 글로벌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창업비자 허용	2013
2011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지화 방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인증제 도입시행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확대 일·학습연계 유학자비, 석·박사과정 전차비자, 단기 유학 비자(D-2-8)	2015 2016
2012	국제화 추진전략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1주기) 시행 Study Korea 2010 Project 시행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2019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발표	조선업 관련 특정 활동(F-7) 비자 요건 대폭 개선	2022
2015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행비자」 시범 실시	2022
2016	국제화 추진 전략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2주기) 시행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2023
2020	국제화 추진 전략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시행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길러규제 완화	2023
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표 및 체류 관리 지침	2023

〈그림 - 3〉 시기별 교육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출처: 이운주·김명광(2023))⁷

정부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뒤이어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하면

7 이운주·김명광,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2023, 113쪽.

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음.⁸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으로 국내 유학생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23년 8월 25일 법무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중 하나로 유학생에게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및 숙련기능인력(E-7-4) 및 전문인력비자(E-7)의 확대를 발표하였으며,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스터디코리아 300k)’에서 202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외국인 유학생 관리 주무부서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교육부로 양 기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양 기관의 자료는 서로 다른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153,36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교육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0년 기준 153,695명임. 반면, 2021년에는 법무부 조사 결과는 163,699명이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는 152,281명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편차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현황 파악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발급 비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는 교육기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즉,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가 교육부 조사 결과를 상회하는데, 이는 휴학, 자퇴, 미등록 등으로 유학이 중단되었으나 국내에 체류 중인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8 고민경, 앞의 글, 479쪽.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2년 12월	'23년 12월
총계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197,234	226,507
유학(D-2)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34,062	152,094
한국어연수 (D-4-1)	57,971	61,867	51,545	52,506	63,146	63,146	74,361
외국어연수 (D-4-7)	10	10	6	15	26	26	52
전년대비 증감률	18.9%	12.1%	-14.9%	6.7%	20.5%		14.8%

〈표 - 1〉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월 1일 기준)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표 - 2〉 연도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출처: 교육부)

2) 졸업 후 진로 현황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여 생산성의 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내 정착으로의 유인을 지향하고 있음. 대학 졸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은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임. 졸업자의 국내 취업률은 2020년 기준 4.7%에 불과하고 '미상'의 경우가 50%를 상회하고 있음. 이는 유학생들이 정식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하거나 제3국으로 이탈한 경우가 다수임을 시사함.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인데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국내 취업률은 4.7%에 지나지 않아 유학생의 유입이 국내 정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8 II.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이

(단위: 명, %)

	졸업 후 상황					비율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462	890	99	473	-	60.9	6.8	32.4	-
2008	2,280	1,318	82	880	-	57.8	3.6	38.6	-
2009	3,563	2,128	134	1,301	-	59.7	3.8	36.5	-
2010	4,798	2,004	167	1,551	1,076	41.8	3.5	32.3	22.4
2011	6,383	3,269	294	1,589	1,231	51.2	4.6	24.9	19.3
2012	9,492	4,684	612	1,634	2,562	49.3	6.4	17.2	27.0
2013	10,238	3,957	454	1,572	4,255	38.7	4.4	15.4	41.6
2014	9,713	3,516	569	1,380	4,248	36.2	5.9	14.2	43.7
2015	7,634	2,189	449	1,089	3,907	28.7	5.9	14.3	51.2
2016	6,551	1,847	397	734	3,573	28.2	6.1	11.2	54.5
2017	7,001	1,970	404	815	3,812	28.1	5.8	11.6	54.4
2018	7,701	2,417	470	737	4,077	31.4	6.1	9.6	52.9
2019	9,212	3,190	447	908	4,667	34.6	4.9	9.9	50.7
2020	10,952	3,243	512	1,271	5,926	29.6	4.7	11.6	54.1

주: 1. 2009년까지는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세 범주로만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2010년부터 '미상' 범주를 추가함.
 2.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은 2007년부터 조사됨.

<그림 - 4>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III.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정주 장벽의 문제

애초부터 한국에서의 정주를 희망한 상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결혼 이민자와는 달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변용적 정체성으로 정주와 이동의 가변과 호환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님.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졸업이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는 변용적 정체성과 한국 정주 희망 요인의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베트남)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본국보다 높은 월급, 생활의 편의, 깨끗한 환경⁹ 등 유학생 제도 외의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유학기간 동안의 만족도가 한국 정주 체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¹⁰ 유학생의 한국 정주 방안은 한국으로의 유입 단계 - 유학 체류 단계 - 취업 단계 - 취업 이후 단계를 아우르는 통시적인 접근이 필요함.

1. 학업상의 문제

1)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어 능력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공감에 필요한 전제조건이자 유학생들의 국내 학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함. 국내 대학 입학에 위한 한국어능력 수준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데, 한국어능력시험 3급은 유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학업 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은 현저히 부족함.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 내 영어 또는 중국어로 개설된 수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부족한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조별과제에 참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낮은 학점으로 연결, 취업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¹

2) 교육과 학습의 질 문제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집중적으로 재학 중인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9 이윤주,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민족연구》, 81, 2023, 103쪽.

10 박윤경 외,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46쪽.

11 박윤경 외, 앞의 글, 221~222쪽.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 증가는 유학생의 국내 대학 학습 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수학하는 내국인 대학생들 및 교수자의 문제와도 연결됨.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학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강의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 학생들과의 팀 활동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수자들과 한국 학생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수학능력이 부족하며 학업에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교수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간의 교류를 위한 활동을 포기하거나 한국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며,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한 과제 수행을 꺼리게 됨.¹² 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학업 과정의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함. 실제로 2018년 대비 2023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2023년 8월 기준으로 학위과정 재학생의 중도 이탈은 2018년 대비 7배나 증가하였다는 사실¹³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이후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수학하는 국내 대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유치 이후 학사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이주자로서의 문제

1) 시간제 취업의 어려움

전통적인 유학생 또는 국제 학생 모빌리티의 패턴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이 영어권 국가로 이동하여 숙련 노동자(skilled-laborers)가 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다면, 근래 유학은 한국과 같은 신흥 유학 목적지의 부상, 장학금이나 지원보다는 자비 부담을 통한 유학 등으로 다변화되었음. 국내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권 학생이 약 91%에 이르며, 전체 유학생의 91.4%가 장학금이나 후원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로 유학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¹⁴ 반면,

12 이선영·나윤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 《교양 교육 연구》, 12(6), 2018, 177쪽.

13 중앙일보, “[사설] 외국인 유학생 3만6000명 학업 중단… 수만 늘리고 관리는 않나”, 2023년 8월 17일자.

14 교육부, <2021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2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01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2021. 1. 30. 최종방문).

2023년 기준 유학생의 고용률은 18%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¹⁵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¹⁶ 학생들이 취업을 신고하지 않거나¹⁷ 혹은 불법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측케 함.

여기에는 시간제 취업 신고를 위한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다는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음. 시간제 취업허가는 그 대상자가 연수생인지, 학부생인지,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지에 따라 그 요건과 범위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할 것이 요구됨. 또한 취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권, 근로계약서,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등이 있고 취업 허용 시간도 학사학위 과정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주중 25시간¹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시간으로 제한됨. 이러한 절차와 요건의 복잡함과 엄격함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른바 불법 노동으로 유입되고 있음.

2) 소외와 차별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는 이주자로서 여타의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소외와 차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특히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유학생 숫자가 적어 본국 출신 유학생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본국 출신 유학생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 출신의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로부터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¹⁹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연구실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다’가 12.1%, ‘어느 정도 있다’가 41%로 전체 53.1%의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²⁰ 이러한 차별감과 소외감은 단순히 이주자로서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와 정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본국으로의

15 통계청,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2023.

16 바트쨥게르 투맹뎀베펠·김도혜,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020, 26쪽.

17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유학생들 중 58.2%가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통계청,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취업시 취업신고 여부 및 신고하지 않은 사유(지난 1년간, 유학생)>, 2023.

18 이는 법무부의 완화 정책을 통해 기존 20시간에서 5시간 증가한 것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6.23.

19 곽윤경 외, 앞의 글, 224쪽.

20 ESC 외, <국내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사 설문 결과 보고서>, 2023, 34쪽.

귀국 이후에도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음.

3. 정주와 공동체 진입의 장벽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와 정주 의사가 뚜렷하고 분명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 절차 때문에 한국 정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구직 비자(D-10)를 받을 수 있는데 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음. 이때 연장을 위한 서류 중 하나로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2024년 기준으로 중위 48%의 주거급여 약 107만원, 6개월에 약 640만원의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상황에서 특히 생활비를 본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다수인 유학생에게는 이와 같은 금액을 체류비로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합계 (%)	한국 측 장학금	본국 측 장학금	학교 장학금	모아 놓은 돈	부모님 지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대출	기타
100	5.7	1.8	6.8	10.6	67.8	6.5	0.3	0.5

〈표 - 3〉 유학생의 생활비 마련 방법
(출처: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또한 E-7 비자는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가 다른데 이러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소득(GNI)의 70~80%에 해당하는 연봉, 월별로 환산하면 한달에 285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함.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사회초년생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로 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IV. 제안

1. 모빌리티 관점에서의 유학생 연구의 활성화

유학생 유입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교육학, 정책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졌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내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학이나 학생 이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유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찰 연구는 미진한 편임.²¹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 중에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대응에 머무를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구조적 관점에서의 학생 모빌리티 연구를 통해 유학생 유입 이전 단계에서의 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해외에서는 유학생, 국제 학생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이들이 왜,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유학을 위해 이동하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유학의 다변화가 일어나서 전통적인 유학 이론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학의 양상을 파악하고 다른 종류의 이주와 차별화된 유학 이주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와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 요인 등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음.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출신 학생뿐 아니라 이주자, 관광객 등의 복합적 정체성을 지니고 그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각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렇게 축적된 연구가 유학생 유입과 한국 정주 유인을 위한 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음.

2. 유학생 관리의 법제적 장치 마련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을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률들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이라는 지위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됨.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처우하거나 지원하는 체제를 법률 정비를 통

21 고민경, 앞의 글, 475쪽.

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인정되는 결혼 이민자, 난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처럼 유학생의 사증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취업 및 체류 보장을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단기적 사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²²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주, 나아가 생산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학사 관리, 복지, 비자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는 2000년에 제정된 호주의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호주는 해당 법률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연수의 질을 표준화하고 등록금 보호 서비스,²³ 학생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 대응의 모델이 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①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②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③ 주거 등 생활 편의 안내, ④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⑤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조). 이 외에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명시하였음(제7조). 전라북도는 2022년 10월 21일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는바 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와 대동소이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지원사업 내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전라북도는 구체적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유학생 네트워킹 파티,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²⁴

22 손흥기,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중앙법학》, 25, 2023, 377쪽 참조.

23 호주의 교육 제공자가 유학생이 지급한 수업료에 상응하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대체 수업 제공이나 수업료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주 교육부가 수업료의 환불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24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 외국인 유학생 상생 프로젝트’ 활동”, <https://jbsocial.org/%EC%A0%84%EB%B6%81-%EC%99%B8%EA%B5%AD%EC%9D%B8-%EC%9C%A0%ED%95%99%EC%83%9D-%EC%83%81%EC%83%9D-%ED%94%84%EB%A1%9C%EC%A0%9D%ED%8A%B8-%ED%99%9C%EB%8F%99>. (2024. 1. 20. 최종방문).

3. 탈아시아중심 유학생 유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전체 유학생 중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 출신이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나 국제적 이슈에 따라 유학생이 급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듯 특정 소수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유학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은 일찍이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럽연합 내 대학생들이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대학에서 일정 기간 수학하도록 하고 이를 본국의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수학 기간 동안의 등록금 면제, 일정 금액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고 있어 유럽 내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용 중임. 한편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비유럽 국가와의 연구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 석사, 박사 프로그램인 ERASMUS MUNDUS를 시행, 2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에서 수학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장학제도들을 모델로 비아시아권 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장기적이고 거시적 전략 마련

유학생은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국과 이주 목적지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또 한국 특정 지역의 장소성을 변형시키기도 함. 또 학생이었던 이들은 국내에서 노동자, 결혼 이주자, 관광객 등 얼마든지 그 정체성이 다양화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한국으로의 유입과 취업 중심의 정주 체류로 이끄는 방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적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학생 정책은 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거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인 유학생뿐 아니라, 혼인, 노동을 계기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민도 있음. 유학생의 한국 정주 성패는 결혼 이주,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우호적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하와도 무관하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있어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 수용 정책과 부정합 관계에 있음. 타문화,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 시선과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정책은 청년 이주자의 특징을 가진 유학생의 정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난민의 불법 노동은 이른바 위장 난민의 문제로 난민에 대하여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언급되지는 않음. 이는 한국에의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모순적 태도로서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이에 모든 외국인 정책에 기본 틀을 확정하고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추진하여야 함.

또한 유학생 유입을 위해 유학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본국 또는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기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의 유학생 유입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학생 유치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신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외국인 유학생들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질 높은 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²⁵

5. 비자 절차의 개선과 취업 기회의 확대

비자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됨. 특히 우리나라는 취업과 관련된 비자 취득 또는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숙련된 노동자조차도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에서의 정주를 포기하거나 또는 불법 체류, 불법 노동으로 유입되고 있음. 한국의 비자 정책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국내 취업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유학 메리트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²⁶

비자와 같은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언어적 문제, 한국에서의 교육과 취업 내용의 연계성 미비 등 사실상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대학 내 취업설명회 개최, 외국인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한 보

25 김화경, <국내 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6, 2019, 164-165쪽.

26 경향신문, “①서바이벌 ‘비자게임’-당신은 이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2022년 3월 23일자.

조와 지원, 졸업 전 중장기 인턴십 제도²⁷,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정 기간 재직 조건부 지원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해야 하는바, 개별 대학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곤란하다면 지역 내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27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은 2023년 7월에서야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연합뉴스, “LG이노텍,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첫 인턴십…“다양한 인재 확보”, 2023년 6월 19일자.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고민경,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4), 2022.
- 김도혜,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2019.
- 김화경, <국내 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6, 2019.
- 바트첵게르 투멩템베렐·김도혜,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020.
- 손흥기,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중앙법학》, 25, 2023.
- 이선영·나윤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 《교양 교육 연구》, 12(6), 2018.
- 이윤주,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민족연구》, 81, 2023.
- 이윤주·김명광,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2023.

2. 기타 자료

- 곽윤경 외,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경향신문, “①서바이벌 ‘비자게임’-당신은 이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2022년 3월 23일자.
- 교육부, <2021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2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01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6.23.
- 연합뉴스, “LG이노텍,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첫 인턴십…“다양한 인재 확보”, 2023년 6월 19일자.
-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 외국인 유학생 상상 프로젝트’ 활동”, <https://jbsocial.org/%EC%A0%84%EB%B6%81-%EC%99%B8%EA%B5%AD%EC%9D%B8-%EC%9C%A0%ED%95%99%EC%83%9D-%EC%83%81%EC%83%9D-%ED%94%84%EB%A1%9C%EC%A0%9D%ED%8A%B8-%ED%99%9C%EB%8F%99>.
- 조선일보, “[지방이 다시 된다] ⑥ ‘청년 뺏기 경쟁’은 제로섬 게임… “지역만의 매력을 브랜딩해라”

- 2022년 11월 4일자.
- 중앙일보, “[사설] 외국인 유학생 3만6000명 학업 중단… 수만 늘리고 관리는 않나”, 2023년 8월 17일자.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취업시 취업신고 여부 및 신고하지 않은 사유(지난 1년간, 유학생)〉, 2023.
- 통계청,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2023.
- ESC 외, 《국내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사 설문 결과 보고서》, 2023.